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과 한·미의 대응 방향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ccheong@sejong.org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북한 발표는 11시 20분) 북한은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양국은 3단계 탄체가 해상에 떨어져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단계 추진체가 발사장으로부터 약 3,846 km 거리의 해상에 떨어졌다는 점은 11년 전에 비해 북한의 로켓 기술이 두 배 가까이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에 이어 이번에도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된다. 일방적으로 평화적 의도만을 강조하거나 군사적 의도만을 강조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로켓 발사는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 그리고 국내 정치적, 대외정책적 목적 등 다양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냉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이번 사태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의 첫 번째 이유는 '평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발행하는 주간지 통일신보는 3월 7일자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공위성 발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지금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은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려 하는 것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북한은 1998년의 '광명성 1호' 발사 때와는 다르게, 지난 3월 로켓 발사 시기와 동해 및 태평양의 궤도 좌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미리 통보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별도로 공지했다. 그리고 4월 5일 로켓 발사 전 발사 시간을 미국 측에 알려 이번 로켓 발사가 결코 대미 공격적 성격을 띠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었음도 시사한다.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 4월 4일자 기사에서 "현 시기 조선의 최대 과제는 경제부흥"이라며, "대형 로켓의 개발은 우주공간에 운반된 각종 위성의 이용, 로켓 개발 과정에 탄생한 첨단기술의 민수 이전, 위성 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출 등 일련의 경제적 효과를 상징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로켓 발사의 '평화적인 목적'을 강조했다.

북한은 1998년의 '광명성 1호' 발사 때와는 다르게, 지난 3월 로켓 발사 시기와 동해 및 태평양의 궤도 좌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미리 통보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별도로 공지했다. 그리고 4월 5일 로켓 발사 전 발사 시간을 미국 측에 알려 이번 로켓 발사가 결코 대미 공격적 성격을 띠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었음도 시사한다.

로켓 발사의 두 번째 이유는 군사적인 것과 대미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신보 4월 4일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현실을 외면한 구태의연한 대결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조선(북한)을 다계단(다단계) 로켓 기술의 군사이전으로 떠밀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유지한다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라는 군사기술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또한 클린턴 미 행정부 때 북·미간 미사일 협상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이번에도 북한이 미국과 미사일 협상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정보 분야에서의 열세로 북한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특히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탐위성에 의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조평통 대변인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피포위의식 때문에 북한 군부는 비록 초보적이라도 우주에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중국이 1970년에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동방홍 1호와 같은 시험통신 위성으로 보이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군용위성 발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 시도일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정보 분야에서의 열세로 인해 2006년 7월말 한국이 인공위성 ‘아리랑 2호’를 발사한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아리랑 2호가 북한지역에 대한 “정탐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군용위성”이라고 규정하였다. 한국의 발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성은 지상에 있는 1m까지 크기의 물체를 식별해낼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해상도 1m이하의 위성은 군용으로 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 분야에서의 열세로 북한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특히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탐위성에 의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조평통 대변인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피포위의식 때문에 북한 군부는 비록 초보적이라도 우주에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로켓 발사의 세 번째 이유는 국내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유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한은 1998년에도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 선거 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 이 발사가 실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선전함으로써 당시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이번에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후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실패한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선전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 총비서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축제 분위기에서 추진하고 체제 결속의 계기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처럼 올해 1월초 김정일이 3남 김정운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했다면, 이번 로켓 발사는 대내적으로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의 공동통치 시대 개막을 알리는 ‘축포’의 의미도 가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로 간주하여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였다. 이에 반해 중·러는 이번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평화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제재결의보다 낮은 수준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선에서 타협하게 되었다.

4월 1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클라우드 헬러 의장에 의해 발표된 성명은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기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 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24일 오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

행, 조선령봉중합회사를 제재 대상 북한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북한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남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되고 북한은 발사하면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면 북한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는 인정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이 포함되자 북한 외무성은 이에 반발해 4월 14일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핵무기 추가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명은 또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의 대응 방향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에 대한 반응에 대해 한·미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7월 한국은 나로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므로, 남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되고 북한은 발사하면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면 북한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는 인정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발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미사일의 위협 제거 문제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북한과 미국은 1999년 9월 미사일회담을 열어 북·미가 정치회담을 하는 동안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다는 선언을 내놓았고, 2000년에는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의 방미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미사일 문제 해법의 합의 직전까지 도달했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300마일(약 500km) 이상 미사일의 생산과 개발, 배치를 중단하고 이미 보유한 것은 수년 내 폐기하며, 반대급부로 미국은 북한에 매년 인공위성 발사를 대신 해주고 또 10억 달러어치의 식량 등을 수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같은 해법은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북한과 오바마 행정부 간에 북한 미사일의 위협 제거와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는 양국의 주요 관심사를 절충시키기 위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북한이 제2의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의혹 제거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 증대와 핵실험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과정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미국진보센터(CAP)의 선임 부회장을 지낸 시린시온 회장의 주장처럼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세 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혁신을 이룩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더 크고 사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과 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을 견뎌낼 수 있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은 당분간은 세 가지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력이나 연구기관의 역량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

할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북한이 제2의 핵 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의혹 제기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 증대와 핵실험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 고위급 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북핵 관련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수습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전면 참여 시기는 북·미 관계와 남북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가 한국 정부에게는 PSI 전면참여를 발표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유엔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이 들어간 의장성명이 채택되어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끓는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북한은 매년 미사일 부품 및 기술 수출로 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이스라엘과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공조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PSI에 전면 참여하되, 동시에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및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으로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온양면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무기 수출 기회만을 차단한다면,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종연구소 출판안내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1997 vs. 2007

정성장 (편)

한국 사회에서 북한 붕괴론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7년과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북한의 국내정치와 경제, 사회, 대미 정책 그리고 대남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1997년에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3년상을 마치고 당·국가인 북한에서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였고, 이해 말에 김정일의 통치 방식을 상징하는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로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97년 이후 북한 경제는 서서히 회복 기조를 보였으나,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여 그 해 실시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개방 조치들이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반발하여 핵 실험을 강행한 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과 직접대화를 진행함으로써 2007년에는 북핵 관련 2.13합의와 10.3합의가 도출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하며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담긴 10.4정상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희망찬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안보 환경변화와 한미동맹 재조명

이대우 (지음)

이 책은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국제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안보질서가 변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안보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탈냉전 이후,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유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부에서는 탈냉전 이후 한미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갔는가를 검토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한미갈등으로 발전되었다. 그 결과 '한국 방위의 한국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이 단행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2012년 한국군에 전환된다. 그러나 과연 세계 4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제3부에서는 상기 과정을 거쳐 현실로 다가오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과 관련하여,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제시했으며, 한국의 안보 확보를 위한 국제 '안보협력'을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